

광주·전남 교육통합시 1조30억원 지원... 학군제는 논란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치 법안도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교육 통합시 총 1조30억원의 추가 교육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 문제 등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은 특별법에 포함시킬 자치권 강화와 지역개발, 첨단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지원 정책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자치 법안은 1개 편(編), 4장(章), 18조(條)로 구성돼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이 눈에 띈다. 특별법 제45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



기존 보통교부금에 1조30억원 추가 지원 학군제 운영 특별법 빠져 사회 갈등 예상

하지만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이 특별법에서 배제돼 향후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는 과밀학급으로 평준화인 기존 학군제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평준화 교교가 많은 전남은 광주 학군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학군제가 운영될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광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공청회에서 "광주와 전남 공동 학군제를 이미 제안해둔 상태"라며 광주 쏠림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 간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정치권이 공론화 없이 교육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노조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돼도 교육자치는 분리·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교육계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교육통합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행정통합과 동시에 교육자치도 통합해야 한다는 속도론이 대립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이달 내 행정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달리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 통합이 속도전에 밀려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

6월 지선 통합교육감 선출 놓고 교육계 온도차

공론화 거쳐야 '신중론'·통합 시너지 '속도전'

이정선·김대중 교육감도 '선출 시기' 입장차

교육감은 지난 20일 오후 KBS광주방송총국 생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교육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교육 구성원들의 공론화와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시너지와 정부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의 온도차는 행정통합 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 보장과 교직원들의 인사 안정성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보이는 반면 김 교육감은 통합의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속도전을 경계하며 교육통합을 행정통합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교육의 백년대계를 행정의 속도전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며 "교육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인사, 교육재정 배분, 학교 통폐합 등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 제기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교육 여건과 과제가 현격히 다른 광주·전남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삶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양 시·도에 따라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계의 공론화와 속의 과정 없이 정치권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도 통합 교육감 선출 여부에 따라 진로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통합 교육감 선거가 확정되면 교육 환경이 크게 다른 도시, 농어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 전략을 새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를 놓고도 현직과 예비후보들 간 입장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성매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단속에 나서 전남 오후 4시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성매수자 관리에 사용했던 스마트폰과 범죄수익금 136만원, 영업용 컴퓨터 본체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스마트폰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전남도, 치매·독거노인 등 저체온증 예방 총력 외출 시 동행·연락처 적힌 인식표 착용·안부 확인 등 강조

전라남도는 겨울철 지속되는 한파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특히 치매환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한랭질환 환자는 총 115명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74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대부분 고령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2명(63%)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85명(74%)으로 실내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발

생 비율이 높아 한파 시간대 외출과 장시간 야외 노출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환자와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은 추위를 인지하거나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파 시 무단외출이나 장시간 배회 등에 따른 저체온증 등 중증 한랭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한파 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45개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달만에 원상회복 '벼 경영안정비'... 전남도 농정엔 불신

"정책 결정 과정, 농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초 삭감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다.

삭감 결정 이후 강한 반발을 이어 온 농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전남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초 전남도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이중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 속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

2024년 기준 ha당 평균 65만원(농가당 2ha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도비는 228억원, 나머지는 각 시·군비로 총당됐다. 매칭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비 50%를 삭감하면서 도비 예산은 114억원으로 줄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비 제정 등에 따른 쌀값 안정

체계 강화, 국가주도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 마련 등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 10만원 상당한 7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 농민들과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물 빼서 윗물 퍼는 식'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 반발이 지속하자 전남도는 의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삭감 조정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비와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원상회복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왔던 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선 이른 시간 내 원상회복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농업정책은 농민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에서 피부미용업으로 위장해 주거 단지가 모여있는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실장, 여종업원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광주서 '피부미용업 위장' 변종 성매매업 일당 검거

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가에 샤워실과 침실 등을 설치한 뒤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수자들을 모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성매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단속에 나서 전남 오후 4시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성매수자 관리에 사용했던 스마트폰과 범죄수익금 136만원, 영업용 컴퓨터 본체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스마트폰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